

■ 한반도 정세 중대전환점 오나

6자회담·남북관계 '올스톱' ... 冷戰회귀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의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2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조치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흐름의 새관짜기를 둘러싸고 그동안 내연해온 남북 북, 그리고 주변 4강 사이의 각축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초부터 정세 흐름을 견인해온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 흐름이 '올스톱'되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가일층 뚜렷해지고 있다. 전환의 흐름은 크게 볼 때 '대화국면'에서 '대립국면'으로의 회귀다. 북한의 도발자제와 유화적 태도를 전제로 모색돼온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가 퇴조하고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이에 대한 북한의 강경대응이 다시 대립축을 형성하는 '대립'과 '압박'의 구도가 재연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진짜 천안함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이른바 '패러다임 슈프트'의 국면"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주변에서는 현 정부가 임기를 의식해 관계 개선이나 회담개최에 신경쓰기 보다는 북한의 근본적 반성과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초강경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대북 강경태도는 국제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와 맞물려 6자회담 재개 흐름과 남북관계를 상당기간 '동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북한 쪽으로부터 진정으로 의미있는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수개월 동안 남북간에는 대화가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이날 외교·군사·남북관계를 망라해 내놓은 다양한 대응음성들은 결국 정부의 이 같은 방향설정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 교류·협력 중단은 가장 중요한 방향타를 제공하는 조치다.

우리 국민들의 방북 불허와 북한 선박운항 금지, 개성공단 축소운영

등 주요 조치들은 결국 이와 연동되거나 뒷받침하는 조치들이라는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중단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응징과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군사적 조치도 큰 틀에서 이와 맞물려 있다.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유·무형적인 위협과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다.

외교부가 추진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방안은 '제재국면'의 실질적 강화를 의미하고 있다. 외교부는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특히 주요 관련국과 우방들의 독자적 양자 제재조치로 이어지며 가일층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고강도 독자 금융제재를 북한에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화'와 '협상'도 없던일로 ... 초강경 태도

'참을 수 없는 고통' 겪어 진정한 사죄 유도

이 같은 정부의 대응조치가 온전히 가동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 등의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있다는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천안함 외교전'을 둘러싼 변수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천안함 대응을 계기로 6자 회담 추동을 위한 5자 공조체제가 이완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상황이 복잡미묘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사태에 따른 대북조치의 하나로 대북 심리전 재개를 결정한 가운데 24일 중동부전선을 지키는 백두산부대 최전방 GOP 장병들이 확성기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기류는 24일 개막된 미국과 중국간의 제2차 경제·전략대화에서 확인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부통령은 개막식에서 "미·중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제재에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다이빙게 국무위원은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며 여전히 소극적인 스탠스를 보였다.

이러한 기류는 24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하는 중국 우대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새롭게 진전된 언급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관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앞으로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가더라도 중국이 선뜻 대북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은 향후 정세흐름을 좌우할 심상찮은 복병이다. 북한은 정부의 이번 후속조치

에 대해 '맞불조치'를 내놓으며 '강(強) 대 강(強)'의 위기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제3차 핵 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대두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우리측의 대응조치를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또 하나의 엄청난 군사적 도발행위"라며 "반역패당의 전쟁도발 기도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우리(북)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고,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후속 대응조치 발표를 계기로 '천안함 외교전'이 본격적인 대립국면으로 발전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흐릿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경험·교역 전면중단 왜

북 '돈 줄죄기' 본격화

정부가 24일 꺼내 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험·교역 전면중단 카드는 '돈 줄'을 죄어 북측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北 연 3억달러 직접 피해 예상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 반입(수입) 규모는 2억4519만달러다. 여기서 통관 및 하역 비용, 선박운임, 중개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뺀 액수가 물건값으로 북측에 제공됐다.

지난해 원자재나 반제품을 북측에 보내 현지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위탁가공 교역 규모는 2억5404만달러(반입한 생산물 금액 기준)다.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들어가는 노임 등은 이 액수의 10~15%(2500만~3800만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험 중단으로 북측은 적어도 2억5000만달러에서 3억달러 정도의 직접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등이 중단되면서 대북 압박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연간 60억 원 규모의 정부 관계부처 자체 대북사업도 중단된다.

개성공단 120여개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4만명 기준) 임금 및 사회보험료로 1년에 약 5000만달러가 제공된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남북교역(18억2037만달러) 가운데 사회문화 협력 등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상업적 거래가 전체의 94%를 차지

해 대북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역·경험 중단으로 상당수 북측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여 이 역시 북측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역 총 규모는 2000년 4억 2515만달러에서 2007년 17억9790만달러, 2008년 18억237만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16억 7908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대북 신규투자가 금지되는 가운데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투자는 총 55건으로, 이 가운데 북측의 열악한 투자환경 등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10여 건에 불과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1천300만달러를 지원했고, 이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대북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조8천440억원(정부차원 2조759억원, 민간차원 7천 681억원) 수준이다. 올해는 4월말 현재 127억원이 지원됐다.

◇남측 기업도 피해 = 대북 교역은 '양날의 칼'이어서 우리 측의 피해도 예상된다.

대북 위탁교역을 하는 업체는 200여개, 일반 교역 업체는 580여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남북 경험 보험과 교역보험에 든 업체는 각각 2개사와 3개사에 불과해 교역중단 에 따른 피해가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北 추가공격 차단 한국과 협조"

미국 백악관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적절하다(entirely appropriate)"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특히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

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방위에 대해 미국과 관련한 대북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적절하다(entirely appropriate)"고 강조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증을 지시했으며, 미군에 대해서도 북한의 추가 공격을 차단하고 대비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북 선박 남측해역 통항 불허

헬기·군함 파견 제주해협 통과 차단

북 선박 항해거리 53마일 늘어 물류비 피해 막대

정부가 24일 북한 선박의 남측해역 통항 불허 카드를 내놓음에 따라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협약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해역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역시 제주해협이다. 제주해협은 북측 선박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지름길로 북측 입장에서는 연료비와 물류비 단축 등의 효과가 크다. 지난 2005년 발표된 남북해운협약에 따라 북측의 이용이 가능해진 항로이다.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제주해협 항로를 이용하면 약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 이상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을 불허하면 북측은 남북해운협약 위반과 국제법상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을 주장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해통항권은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일 없이 그 영해를 통항할 수 있는 국제법

상의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이 정전체제에 있고, 특히 북측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만큼 무해통항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 항로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강제퇴거할 계획이다. 해군은 해경과 함께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기 위해 헬기와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이 우리 정부의 통항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해협 통과를 시도하면 1차로 경고방송을 하고 무선신호를 통해 정선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실력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고방송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정선명령을 하되 불응하면 차단기동 등 퇴거작전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남북해운협약의 발의 이전에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할 때 해군은 굵은 바닷줄을 이용해 상선의 스크루를 멈추는 방안을 모색했다. 헬기를 이용해 배의 굴뚝에 얼음을 쏟아부어 엔진 가동을 멈추게 하는 방안이나 함정을 이용한 차단기동을 시도하려 했으나 북한 선박이 워낙 빠른 속도로 기동해 실제 작전을 펼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남북해운협약의식에 의한 해상항로

■ 남북해운협약(2000년 12월 27일 체결)
 - 목적: 상선 운송, 항해, 통행, 안전, 협력, 운송, 정보 공유, 해상협력사업에 관한 협력, 운송, 정보 공유, 해상협력사업에 관한 협력

■ 항해: 주 항로는 안전을 위하여 (우회할 경우) 공해: 배의 운송, 항해, 통행, 안전, 협력, 운송, 정보 공유, 해상협력사업에 관한 협력

■ 항행구역 (40N): 항해협정에 따른 특수규정에 의해 우리가 운송하는 선박은 항해할 수 있다.

김장환교육감후보에 대한 후원은 "희망 전남교육을 이끌어갈 힘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변화 김장환의 새로운 약속"

- 1등이 아니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 사교육이 아니어도, 앞서갈 수 있습니다.
- 부자가 아니어도,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 서술이 아니어도, 똑똑할 수 있습니다.

후원안내

- 후원금은 개인만 가능하며 기부한도는 500만원까지입니다.
- 무기명으로 10만원까지 기부 할 수 있습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나머지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광주은행 : 053-121-675554
 농협 : 352-0144-5439-53
 애금주 : 김종환 (김장환입후보후원회)

전라남도교육감 역임 교육감은 역시 김장환

주소: 전남 순천시 조해동 1246-1 황성빌딩 3층 전화: 061) 746-0002
 전라남도교육감후보자 김장환 후원회

행운의 일곱번째 현명한 선택!! 맨아래칸 김장환